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3월 03일 (수)
제 252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 1. '인권' 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2.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등돌린 노동청
3. <시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비판

'인권' 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미 의회 북한자유법안,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인권'을 수단으로 삼아 북의 붕괴를 재촉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추진 중이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그것은 지난해 11월 20일과 21일 잇따라 미 상·하원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 아래 자유법안)'이다. 이것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2일 낮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인권·평화·통일운동 단체 활동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자유법안은 서두에서 법안의 목적을 첫째 대량살상무기와 이와 관련된 운반수단, 재료와 기술의 개발과 판매·이전을 금지하는 것, 둘째 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 지원, 셋째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라고 밝히고 있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된 법안은 북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조성(제1장), 북한주민의 북한 탈출과 미국 입국 등 지원(제2장), 대북 라디오 방송 연장 및 라디오 보급(제3장), 북의 민주화와 시장 경제 장려(제3장), 북-미 협상에 인권 의제 추가(제4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활동을 위해 2006년까지 총 5억62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특히 탈북자의 미국 입국을 지원하는 단체에는 이중 매년 5백만 달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북양산, 인권보장 안돼

이날 토론회에서 주 발제를 맡은 유정애 연구원(미국 코넬대 개발사회학과 박사과정)은 "이 법안이 목적하는 이른바 '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 지원'이란 북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자유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탈북을 양산해 북 내부의 불안은 야기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법률에 따라 풀릴 돈을 받기 위해 북한 관련 NGO의 난립과 다툼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씨는 "국제인권 논의 속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사회란 특정 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며 "그러나 이 법안은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워 북에 일방적으로 시장경제체제와 미국식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식량권이라는 북 인민의 절박한 인권문제에는 시선도 두지 않고, 여러 조건을 달아 사실상 경제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비판했다. 법안 402조는 '북한경제의 근본적 변화 없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체제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엔이디(NED)의 작품, 북한자유법안

유 연구원은 "인권 문제를 통한 대북압박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네오콘과 극우단체, 보수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고 "엔이디가 그들을 연계하는 중심 축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법안의 발의자인 샘 브라운백과 에반 베이 상원의원은 모두 엔이디와 긴밀히 활동하고 있다. 북 인권을 다루는 국내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도 여러 해 동안 엔이디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엔이디는 미 의회 산하 엔지오로서, 과거 CIA가 했던 비밀공작의 일부를 공개적으로 대신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1983년 레이건 정부 하에 설립된 엔이디는 이란-콘트라 스캔들에 연루됐을 뿐 아니라, 코스타리카, 칠레, 니카라과, 아이티 등 외국의 선거에 개입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세력에 재정을 집중 지원하기도 했다.



자유법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유 연구원은 "법안이 현 상태로 통과되기는 어려운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낙관하기는 어렵다"며 "또, 자유법안이 아니라도 유사한 내용은 언제든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연구원에 따르면, 자유법안의 일부 조항이 4일 국무성에 관한 미 상원의 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자유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이라크해방법은 1998년 제정 당시, 한달 여 만에 초고속으로 미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북한자유법안의 위험성을 공감하며, 빠른 시일 안에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미 의회 및 미국 내 인권·시민단체들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북 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이용되도록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대안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북 인권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은 이후 <인권하루소식>의 지면을 통해 소개하도록 한다.

<기사 처음으로>

##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등돌린 노동청

###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한 노동청 강력 규탄

노동청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을 묵살해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낮 12시 '서울대병원간병인문제해결과공공병원으로서의제자리찾기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 시킨 노동청을 규탄하고 노동청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지난달 17일 조주현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동자들과의 면담에서 △유료소개소에 대한 불법공급중단을 위한 행정조치 △노조가 운영하는 무료소개소 추진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농성에 돌입한 것은 지난 25일. 그러나 농성 3일째인 27일 노동청의 공권력 투입 요청으로 농성 중이었던 노동자 16명은 강제연행 됐다.

공대위는 '불법근로자공급업체' 적발 후에도 계속해서 간병인을 공급받아 온 서울대병원과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노동부의 후속 조치를 요구해왔다. 최정남 조합원은 "사태 해결을 약속했던 노동청장이 불과 며칠 뒤, '다른 병원 가서 일하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서울대병원에서 하려고 하느냐?'고 했다"며 노동청장의 '말 바꾸기'에 분통을 터뜨렸다. 조속히 해결을 하겠다던 노동청장이 서울대병원에 시정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은 등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노동청을 성토했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서울대병원간병인노조 정금자 지부장은 "노동자를 위한 기관이 고령의 여성 노동자를 개처럼 질질 끌었다"며 "노동부가 노동자 편이 아니고 사용자 편이라는 것에 분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 의료노조 정해선 수석부위원장도 "힘 없는 약자에게 쓰는 것이 공권력이 아니"라며 "스스로 불법이라고 이야기 한 것에 대해 행정처리를 하는데 쓰는 것이 공권력이어야 한다"고 노동청의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비난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청의 사과와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피켓시위와 선전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 <시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비판

### 이윤놀음에 야만이 된 이주노동자 정책

4년 이상 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자진출국 유예기간이 지난 달 29일로 종료됨에 따라 강제추방이라는 야만의 광풍이 또다시 몰아닥칠 전망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4차 합동단속이 시작된 2일, 벌써 109일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힘겨운 노동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7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정부의 강제추방 정책에 출국거부로 저항할 것을 다시 한번 선언했다. 그리고 이날 화성의국인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보호소에서는 강제추방 단속으로 연행된 이주노동자 석방과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15일째를 맞았다.

이주노동자 정책에 '노동자'는 없다

강제추방의 그물에 걸린 40여 만에 이르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제도라는 정부의 합법적인 노예노동제도를 견딜 수 없어 뛰쳐나온 '노동자'들이었다. 정부는 미등록노동자들이 40여 만 명에 이르기까지 팔방만 끼고 있었다. 불법체류자라는 신



분을 이용해 자본가들이 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눈을 감았다. 그러다 들면 정부는 미등록노동자들을 강제추방하겠다고 이 잡듯이 잡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유가 뭐냐? 평등노조이주지부의 강현주 활동가는 "장기 체류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이 원하는 미숙련 저임금의 말 잘 듣는 노동자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숙련노동자가 되어갈수록 정부와 자본에게 '물갈이'해야 할 존재가 돼버린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장기체류를 '허'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의 정귀순 대표는 "체류한 지 4년이 넘은 이주노동자에게 출국 후 재취업하라는 조처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주어지는 제한 권리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는 이렇듯 철저한 경제논리의 계산법만이 있을 뿐이다. 올해 8월 시행을 앞둔 고용허가제도 역시 그 계산법에 따른 것이다.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한 것이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한 것 등은 모두 이주노동자를 비인간적인 착취구조에 꼼짝없이 매어두려는 발상에서 나왔다.

#### 차별과 편견이 '노예제도'의 버림목

이러한 정부의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은 그들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편견을 양분 삼아 지속되고 있다. 정귀순 대표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 임금 낮은 것은 당연하지, 남의 나라에 돈벌러 왔으면 고생은 감수해야지, 불법체류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등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많은 편견이 그들을 차별하는 제도를 유지시켜준다"고 주장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금 다른 시선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일해주니까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 역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굴레에 갇혀있다.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이란주 정책국장은 "자본과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비하하고 신분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종종 이러한 관점을 이용한다"고 말한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외국에서 이주해온 '노동자'가 아닌 인간성을 박탈당한 '노동력'일 뿐이다. 자본과 정부는 '합법적인' 노예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야만의 족쇄를 끊고 나온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의 신분을 강제한다. 합법과 불법이 철저하게 자본과 정부의 손익계산에 의해 결정되는 한 그것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동등한 노동조건을 누려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 인권하루소식

2004년 03월 04일 (목)  
제 252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림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강행
2.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노동자'로 인정하라
3.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강행

### 보호소 내 단식중인 이주노동자 4명, 강제출국 당해

법무부가 단식 16일을 넘긴 이주노동자를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 쫓아 버렸다. 3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연행 이주노동자들의 석방과 강제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화성의 국인보호소에서 단식 중이던 바라쉬, 다아, 몽크, 초아 등 4명의 몽골인 이주노동자를 본국으로 강제출국 시켰다.

강제추방저지와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쟁취를위한농성단(아래 농성단)에 따르면 단식농성 16일째였던 바라쉬 씨는 각혈과 하혈로 치료가 절실했으며, 나머지 3명의 이주노동자 역시 단식농성 12일째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원을 밝히기 거부한 화성의국인보호소의 한 직원은 "(10여 일째 단식을 한 이주노동자들이) 오늘 아침에도 뿔뿔 날아 다녔고 아무 이상 없다"며 "출국에 이상이 없으니까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농성단 소냐 씨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을 3번이나 한 바라쉬 씨는 단식 중에도 각혈과 하혈로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다"고 전하며 "10일 이상 단식을 했고, 그동안 제대로 된 치료도 하지 않았으면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비난했다. 소냐 씨는 "보호소 내에서 농성과 이주노동자의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단식 중인 이주노동자를 무리하게 끌어내 강제출국 시킨 것"이라며 법무부의 야만적인 처사에 분개했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이동권 계장은 "이미 2002년부터 몇 차례 자진 출국하라고 해왔지만, 계속 거부하며 불법적으로 남아 있던 것 아니냐"며 "이번 단식 농성자들의 출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농성단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단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4명의 이주노동자는 결국 오후 6시 55분 몽골 울란바토르행 비행기로 강제 출국됐다.

한편, 최근 보호소 내에서의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농성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농성단 마야 씨는 "보호소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육질은 일상적인 것이고, 단식 중인 농성자들에 대한 의약품 전달이나 치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마야 씨는 이번 강제출국 된 바라쉬 씨도 보호소 안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비인간적인 이주노동자 '강제퇴거'라는 지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는 정부의 뻔뻔한 태도에 이주노동자들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 '노동자'로 인정하라

### 노동조합 간부 6인 등 부당해고 당해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노동조합(아래 노동조합)이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지난 1월 7일부터 시청과 시설관리공단(아래 공단) 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 11월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시작하면서 100여 명의 '장애인 콜택시 운송수탁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가 아닌 '봉사자'라는 명목으로 채용되



어 하루 10~12시간의 힘든 노동을 하고도 4대 보편을 적용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2003년 9월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획득, 공단에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2003년 11월 '2004년 운행수탁자 연차 계약에 따른 공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 간부 전원을 계약 해지하기로 결정,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했다.

장애인 콜택시 노동조합 김태선 수석부위원장은 노조 간부들이 업무상의 문제로 해고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공단에 해고의 근거 자료를 요구하자 못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심사위원회가 한 일이니 자기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명단 요구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니,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은 '사전에 체결된 적이 없는 계약을 바탕으로 하여, 공단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기준을 적용한 심사에 대해 그 구체적인 점수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해석을 했다.

노동조합은 지금 서울시와 공단이 해야 할 일은 콜택시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이 아니라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콜택시를 어떻게 증설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위원장은 "지금 하루 평균 콜이 2,000건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은 고작 500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택시도 늘어나야 하고, 택시 한 대에 2교대로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기사도 증원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장오철 교통관리처장은 '콜택시를 반으로 줄일 것을 노동조합 때문에 11명 계약 해지로 그쳤다', '2006년까지 한 대도 늘릴 수 없다'는 발언을 하니, 공단이 얼마나 장애인 정책에 대해 무책임한지 알 수 있습니다"라며 장애인의 이동권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한편, 4일 낮 12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노동조합은 시청 앞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비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단이 특정 평가에서 고의로 축소, 은폐, 조작시킨 구체적 불공정 비리 사례 등 그동안 모은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1인 시위를 하던 김광오 조직국장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는 '참여정부 출범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구속된 78명 가운데 94.9%에 해당하는 74명에게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선전 등)가 적용되었다. 특히 7조 3항(이적단체) 위반 혐의로 무려 67명이 구속되었는데, 이중 53명은 한총련 대의원으로 서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그 동안 한총련은 이적단체의 주요한 근거였던 강령을 변경하는 등 합법화를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법원은 엄격한 법리 검토도 없이 한총련에 대한 낙인찍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 법 집행의 자의성 여전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적용으로 구속된 7명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건학투위 사건'으로 구속된 건대 학생들의 경우, 인터넷에 올려놓은 '4.30청년학생문화제 메이데이' 등의 문서들이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이라는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문서들은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가협은 국내외에서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7조가 여전히 엄격한 법리 적용에 의해서가 아닌 수사기관의 자의적 적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국보법 지난 일도 새록새록

이미 지난 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2000년 해체를 논의하였고 사무실도 폐쇄한 상태에서 실제적인 활동을 중단한지 오래되었던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연합(진보의료연)'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역시 직장인과 현역 군인을 포함하여 11명에 달하는 많은 구속자를 낳은 사건임에도 아직 사건의 실체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 유죄판결의 의미는?

참여정부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100% 유죄판결인데 비해, 1심 재판이 끝난 66명 중 집행유예 판결이 난 경우는 62명으로 93.9%에 이른다. 이에 대해 민가협 한지연 간사는 "집행유예 선고의 의미는 죄가 실행을 선고할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원이 자기 모순



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최창우 대표는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적용실태를 살펴보면, 참여정부가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일부 국민을 배제하는 등 '참여정부'에 반하는 '반참여정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사기관의 무리한 인신구속, 냉전논리에 근거한 기소, 법원의 전근대적인 판결 등 국가보안법으로 야기되는 인권침해는 '참여정부'에서도 현재진행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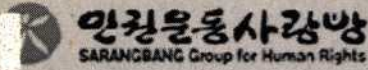
<기사 처음으로>

---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 인권하루소식

2004년 03월 05일 (금)  
제 252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악법 '장군'에 불복종 '명군'
2.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가자! 총파업으로」 >
3.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① 홀리스 여성

## 악법 '장군'에 불복종 '명군'

###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돌입

사회적 약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개악집시법에 인권·사회단체가 뭉쳐 불복종으로 맞서기로 했다. 85개 인권·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4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 달 1일부터 발효된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시민 불복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농민·사회단체들은 개정된 집시법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입을 모으고 정부의 후안무치한 조치에 '법을 어김으로써'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민연합 김홍현 의장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집회와 시위"라며 "집회와 시위를 막는 것은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살기 위해서 개악 집시법에 맞서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역시 2일부터 각 지역에서 있을 농민 집회는 신고하지 않고 실시해 개악된 집시법에 불복종하겠다고 밝혔다.

'불복종 운동'은 국가가 부정한 제도나 정책을 강요할 때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1960년대 베트남전의 참전을 거부한 미국 청년들이 징병법을 위반하기 위해 소집 명령을 불태운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8월 한총련 학생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는 스트라이커부대의 훈련을 막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부대집시위 벌이며 실정법을 어겼다.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각종 금지·제한을 따르지 않는 등 개악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은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는 앞으로 개정 집시법에 대해서 범법공포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집회자유 침해사례를 수집할 감시단과 법률 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20일 개최될 대규모 반전 집회에서는 개정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도로 행진도 예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진행된 민가협 회의도 역시 미신고 집회였다.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은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이불 덮고 누워만 있는 라는 위정자들의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며 "국민의 소리를 차단하고 억압하는 법을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외되고 소수인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꼭 필요한 기제"라며 집회·시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참여정부가 후퇴시킨 인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잡기 위한 불복종 운동이 시작됐다.

<기사 처음으로>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가자! 총파업으로」

### 2002년 발전노동자 투쟁의 기록

펴낸이: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투쟁백서발간위원회/ 334쪽/ 2003년 12월

2002년 2월 25일 새벽 4시 20분, 56년 어용노조의 역사를 끊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올린 지 7개월밖에 되지 않는 발전노조가 역사적인 파업을 선언했다. 그 날부터 5,600여 명의 발전노동자들은 회사와 정부의 전방위적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전기요금의 기하급수적 인상과 전력 대란을 낚을 '발전소 매각 저지와 신자유주의 민영화 반대'를



의치며 38일간 파업을 벌였다. 발전노동자들은 끝내 요구를 쟁취하지 못한 채 현장으로 복귀했고 현장에는 해고와 악랄한 탄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듬해 3월 우선 매각 대상으로 선정됐던 남동발전의 매각 중단 선언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낳았다.

이 책은 2002년 '찬란했던 봄'의 기억과 남동발전 매각저지 투쟁까지,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반대라는 정치적·사회적 요구를 내걸고 싸웠던 발전노동자들의 투쟁 기록을 담아낸 보고서다. 안개처럼 사라져 '산개파업'을 벌이다가도 곳곳에 집결해 꺾꽂이 선전전과 번개 집회를 열어 세상을 놀라게 했던 발전노동자들이 38일간 어떻게 서로를 일으켜 세웠는지, 당시 파업의 주역이었던 조합원들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진다. 산개파업을 벌이는 발전노동자들을 위해 기꺼이 숙소를 내어놓고 경찰의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 압력을 물리치며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냈던 각계의 발걸음도 되살려 놓았다.

반면 교섭권을 위임받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어이없는 타협, 파업을 파괴하고 임의적으로 조합원들을 현장으로 복귀시킨 일부 지방장들의 모습은 노조 내부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라는 어려운 과제를 환기시킨다. 또 복귀 후 현장에 몰아닥친 개별 감사와 등급분류, 손배 가압류, 노예 서약서 강요 등은 '공장 문 앞에 멈춰선 인건'을 되찾기 위해 걸어가야 할 또 하나의 지난한 투쟁이었다. 발전소 매각은 일시 중단되었지만 사회 곳곳에 몰아치고 있는 민영화의 광풍이 언제 다시 발전소를 향할지 안심할 수 없는 상태이다.

백서발간위원회는 당시의 주요 자료를 모은 자료집도 함께 펴냈다.

<기사 처음으로>

## <3·8 여성의 날 특집> 여성 그리고 빈곤 ① 홈

그들이 '홈리스'에서 제외된 까닭은...

[편집자주] 날로 심각해지는 빈곤의 현상이 여성에게는 어떤 모습을 띠는지 3.8여성의 날을 맞아 살펴본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정부의 공식통계 어디에도 잡히지 않는 홈리스 여성, 성매매 여성, 여성 이주노동자의 빈곤문제를 3회에 걸쳐 심는다.

아이엠에프로 상징되는 98년 이후 한국사회가 경험한 극단적 빈곤은 '실직노숙인의 증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 되었다. 실직노숙인의 다른 말은 '실업상태에 놓인 남성 노상생활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빈곤은 여성이라고 비껴가거나 봐주지 않는 법. 노숙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선성적인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극단적인 빈곤에 이른 여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체계는 남성노숙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 여성이 경험하는 극단적 빈곤

갈 곳 없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 '화염동산'에서 일하는 임동숙 씨는 "홈리스를 '거리' 노숙인으로만 한정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노숙인 대책은 쪽방이나 여인숙, 쉼터 등 불안정한 주거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 씨는 '노숙'과 같은 '극단적인 빈곤'을 경험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경험이 매우 다르다고 지적한다. 여성의 경우 성폭력의 위협 등으로 노상생활을 하기에 매우 힘겨운 조건이라는 것. 또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도 여성들의 경우 곧장 '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모순적이게도 남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여성에겐 노동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존재한다. 찢질방, 식당, 다방 등 서비스업종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삶이 결코 노상생활보다 낫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조건에 놓여있는 여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무하다는 것뿐이다.

### 홈리스 개념 확대해야

유엔은 '집이 없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옥외나 일시적인 보호시설 또는 여인숙 등에서 잠을 자는 사람 등 안정된 주거공간이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홈리스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유엔이 홈리스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체계는 거리 생활인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임 씨는 우리사회에서 홈리스 여성으로 "가정폭력을 경험한 후 갈 곳 없는 여성, 경제적 대안 없이 40-50대에 남편과 이혼·사별 등을 경험한 여성, 정신과 마음의 병이 커져 병원을 전전하다가 가족마저 포기해 쉼터를 오가는 여성"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직업이 없고, 지상에 방 한 칸이 없으며, 이들을 지지해줄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졌다는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임 씨는 "단지 노상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을 홈리스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정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홈리스 여성을 단지 거리생활인으로 국한시킬 경우 오히려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가난한 여성에 대한 정책은 부재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한다.

현재 임시보호소, 쪽방, 여인숙 등 불안정한 주거공간에는 일자리를 구해도 높은 주거



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홈리스 여성들이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 상태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들이 겪는 정신·심리적인 소외감은 물질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온다.

빈곤의 굴레를 씌우는 사회

이처럼 여성을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는 무엇일까? 여성을 빈곤한 삶으로 내모는 첫 번째 이유는 성 차별적인 고용환경에 있다. 전체 노동자의 6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7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은 단순노무, 행사, 하위 서비스직 등 주변적인 노동에 종사하며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저소득과 예측할 수 없는 소득에 의존하는 삶이 여성을 쉽게 '빈곤'으로 내쫓고 있음은 분명하다.

두 번째 이유는 성 차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지적할 수 있다. 사회보장권이란 노령,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적절한 소득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국가의 조치에 의해 적절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는데 있어서 남성·여성이 동등하게 혹은 권리를 쉽게 침해받은 사람에게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별적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남성은 82.6%, 여성은 17.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전일로 일하는 남성노동자를 기준으로 구조화되어 육아나 자녀양육으로 임금노동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은 연금혜택을 불리하게 적용 받거나, 남성처럼 노년기의 소득보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젠더에 기반한 빈곤 정책 필요

우리 사회 빈곤의 얼굴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한 쪽이 거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한 쪽은 자살을 하거나 창고인지 부엌인지 분간할 수 없는 구석에 몸을 누이는 모습도 있다. 노숙만이 우리사회 빈곤의 상정을 나타내는 것일 수 없듯이 정부의 대책 역시도 다양하게 포진된 빈곤층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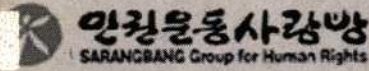
우리 나라 전체 빈곤가구 중 여성가구주 비율이 67.4%나 되고, 소득수준도 빈곤 남성가구주의 67.5%에 불과한 현실을 주의 깊게 고려한다면 빈곤을 없애는 방식에 있어서 젠더(인지적 성)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3월 06일 (토)  
제 252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
2. 구치소내 수용자 폭행 의혹
3. <3·8 여성의 날 특집> 여성 그리고 빈곤 ② 성매매 여성

<논평>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이었던 유시춘 씨가 임기가 채 끝나기도 전 사퇴서를 던지고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그의 낯뜨거운 행보는 인권위원이라는 자리가 한낱 '금벤티'를 달기 위한 경력으로서만 필요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그의 행보는 이미 2002년 말 유현 상임위원과 함께 인권위원의 퇴직 후 공직 취임을 2년간 제한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1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부터 예상되었던 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말 때마침 이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 그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 86년 민가협 초대 총무를 역임한 것 이외에는 인권분야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그가 당무위원으로 재직했던 전 새천년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느닷없이 인권위원으로 등장했을 때부터 그의 길은 예정돼 있었는지도 모른다.

유 씨가 인권위원 재직 당시 자신을 추천했거나 공천을 신청하고자 하는 정당의 눈치를 보았는가 하는 문제는 오직 자신만이 알 일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권위의 도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됐다. 보수언론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권위의 결정이 나올 때마다 '특정 정당 편들기'라는 의혹으로 인권위를 흔들어들었고, 비록 '시정 권고'밖에 할 수 없으나 높은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무기로 다른 국가기관의 권고 수용을 강제해야 할 인권위의 영향력도 그만큼 약해지게 됐다. 금벤티 한번 달아보겠다는 이들이 인권위원 자리에 줄을 서고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철새처럼 정당으로 날아가는 웃지 못할 형국도 이어질 것이다. 한 언론을 통해 밝힌 바대로 설령 그가 국회에 들어가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한다 하더라도 그의 행동이 끼친 해악을 씻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권위는 높은 도덕성과 중립성,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국민의 인권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국가기구다. 그런 인권위가 '안'으로부터 자신의 도덕성을 허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유 씨는 공천 신청을 철회하고 열린우리당도 심사 대상에서 그를 제외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또한 올해 예정된 2기 인권위원 선임과정에서도 별다른 검증과정 없이 자격없는 이들을 밀실에서 인선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구치소내 수용자 폭행 의혹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단식 중 ... 폭행 진상규명 요구

영등포 구치소에서 최근 잇따라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폭행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아래 전해투)는 영등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전해투 회원 강성철 씨가 교도관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5일 강씨를 접견한 이상희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강 씨는 '교도관이 발을 자신의 입에 비벼대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지난달 24일 점검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등포 구치소 장모 계장이 강 씨의 입에 발을 비벼대고 목을 누르는 가혹행위를 가하고, 이에 항의하자 양손에 장갑을 끼고 4-5회 목 조르는 행위를 더 했다는 것이 강 씨가 밝힌 피해 사실이다.



당시 강 씨는 구치소에 수용중인 안성규 씨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소내 폭행사건 규명과 폭행 근절'을 요구하며 다른 2명의 수용자와 함께 2월 16일부터 단식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단식 돌입 전, 소장과의 면담에서 안 씨의 폭행 사실 규명과 피해자 치료를 요구했지만, 소장은 안 씨 사건은 이미 형사 고소돼 구치소 차원에서 사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를 비롯해 영등포구치소에서는 폭행사건과 관련해 2명 수용자가 5일 현재까지도 단식 중에 있다.

한편, 안성규 씨는 지난 1월 6일 영등포 구치소 정모 계장으로 부터 발과 팔이 묶이고 눈이 가리워진 채 몽둥이로 가슴과 발바닥을 수십 차례 구타 당했다고 주장했다. 안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여러 차례 소내 열악한 진료환경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집필신청을 내고 소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안 씨는 가슴과 양 발바닥에 멍이 들고 앞니가 깨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후 안 씨는 폭행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이다.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의혹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수용자 단식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치소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활동가는 "교도관의 폭행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구치소가 이를 방치하고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 < 3·8 여성의 날 특집 > **성매매 여성** 그리고 빈곤 ② 성

### 빈곤의 그늘 속에서... 선택할 수 없는 성매매

성매매에 관한 논쟁에서 항상 제기되는 논점 중 하나는 '자발'이나 '강제'냐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성을 팔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말을 떠올리면, 성매매는 자발과 강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 빈곤이 매개되는 성매매 유입 경로

"이혼하고 엄마와 아들과 동생과 살고 있었는데, 제 월급이 유일한 수입이었어요. IMF가 되면서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동생이 쓰러졌어요. 수술을 위해 목돈이 필요했는데, 가난한 이혼녀가 갑자기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갔어요. 술집이었는데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주었어요. 그 돈으로 동생은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 어떻게 해서라도 빚을 갚고 가족들에게 갈 생각이었는데, 이 빚은 갚아도 갚아도 줄어들질 않아요. 이자 제하고, 방 값 제하고,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는 날엔 벌금을 내야하고, 그러다 보면 월급은 거의 없고, 식구들 생활비 보내려면 업주에게 또 돈을 꾸고. 정말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언제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새움터, 2001.12)

이 사례는 성매매 여성의 실태를 통해, 여성이 어떤 경로로 성매매에 이르게 되는지 보여준다. '성매매 피해여성 재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 조진경 소장은 "생계문제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여성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다"라고 지적하며 "최근에는 카드 빚으로 인해 성매매로 유입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말한다. 빚을 권하고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 정책이 또 다른 한편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을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시키고 있는지 반증하고 있다.

#### 성매매의 족쇄 '선불금'

성매매로 유입된 여성은 좀처럼 성매매 현장을 벗어나기 힘들다. 가장 발목을 잡는 것은 '선불금 제도'이다. 선불금 제도는 성매매 여성에게 일종의 '족쇄'같은 것이다. '선불금'이란 업소에 취직하면서 미리 받는 돈을 말하는데, 이자는 기본적으로 5부 이상이고 이자율은 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이자조차 갚기 버거운 상황에서 지각비와 결근비(하루 30만~150만원)까지 보태면 그것은 '노예문서'나 다름없게 된다. 선불금을 갚기 위해 다른 업소에서 다시 선불금을 받고 일자리를 구하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5백만에서 2천만원이 또다시 빚으로 보태진다. 결국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러한 채무관계는 여성을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한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2002년 7월 '성매매 관련 범죄 수사 및 공판 시 유의사항'을 발표해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의 무효 고지'를 명시하였다. 또한 최근 법원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빚은 무효라는 판결을 통해 선불금이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는 고리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제까지 성매매 여성은 '처벌대상'이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풍속규제'의 차원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



의에서 통과된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아래 성매매방지 관련법 들)은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가난한 여성들에게 자활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탈 성매매 여성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어 직업교육이나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을 국가가 책임지게 했다. 또한 가해자인 성매매 업주나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폭행, 감금, 인신매매 등 성매매 여성의 희생이 지금도 생생한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 사건이 일어난 지 4년만에 비로소 성매매방지 관련 법들이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 법들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조 소장은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면서 피해자의 범위가 축소"되었고, "피해자 규정에 '선불금에 의한 강요' 조항이 빠지면서 여전히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선불금 족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여성단체들은 불법적인 성매매 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조항의 추가를 주장했지만 법에 담겨지지 못했다.

####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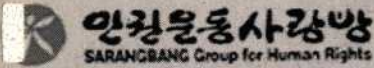
최근 19~39세 여성의 10%인 33만여 여성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는 여성을 성산업으로 유입시키는 요소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조 소장은 "무엇보다도, 여성이 성산업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성위주 접대문화는 성산업을 급속하게 확장시켰고, 거대한 성산업은 그 자체가 자본의 블랙홀이 되어 가난한 여성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는 빈곤이 '여성의 몸'을 통해 드러나는 성적 착취의 또 다른 이름이다. 빈곤이 유독 성매매라는 방식을 통해 여성에게 전이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여성이 놓여진 차별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또한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고, 이혼의 증가로 여성이 가족의 생계가 책임지는 경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예가 되기 싫으면, 성산업에라도 종사하라'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조 소장은 이를 가리켜 "성매매를 권하는 사회"라고 일침을 놓는다.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 착취임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곧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출발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3월 09일 (화)

제 252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2.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3.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평화 바람' 평택에서 속제로 만나다
4.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 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과 공무원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본지 2월 25일자 참조)

이 씨는 진정서에서 자신의 임용거부가 대법원에서 통보한 성적, 경력, 연령, 직무수행 능력 등의 고려가 아닌 국가보안법 전과 또는 그로부터 유추된 사상이 실질적인 이유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근거로 예비판사 임용 성적권 내의 임용신청자 중 이 씨와 신청을 철회한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비 판사로 임용된 사실을 들었다. 또한 9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용권 내의 성적일지라도 모두(합계 8명) 임용을 거부당했다고 밝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법관 임용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이 씨의 면접에서 '과거 자본주의 반대, 사회주의 지지 주장을 하였나요? 당시의 동료들과 아직도 만나고 있나요? 한총련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등 이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와 사상 검증 질문에 집중했다고 이 씨는 전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 임용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면·복권된 전과를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 상의 차별행위로, 이는 헌법 11조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사건번호 2002진차47)이라며 구체조치 이행을 권고했다. 또한 "신원조사 회보시 사면·복권된 전과를 통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통보하지 말 것을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보안업무규정 31조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어디에도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을 통보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같이 사면·복권된 전과에 따른 차별이 반복되는 것은 국정원과 경찰청이 사면·복권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보유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관행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면되어 유죄판결의 선고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유죄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96도2153)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 씨는 "아직도 나 같은 사람이 있고 내년에도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것이 답답하다"며 "인권위의 권고라는 것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여론의 압력을 통해서 내년에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지문날인이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이라는 것은 주위 친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일이에요.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도 설득력이 부족한 지금, 지문날인은 군사정권의 악습일 뿐인 것 같아요." 고교 3학년 이가빈 씨의 말이다.

이가빈 씨 외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을 거부한 청소년 3명은 9일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에 나섰다.

소송을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지문날인은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만 집행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37조 2항에 위배된다"며 지문날인 제도의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가 감시, 관리하는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지문날인이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어 위헌이라고 밝히고 있다.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국가'는 '한국판'으로 불필요한 정보수집은 국민에게 위압감과 굴욕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1년간 범죄 150만 건 중 지문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는 2천여 건에 불과하며, 이를 위해 전국민 성인의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한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

이번 헌법소원은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에 이른 청소년들이 국가에 의해 열 손가락 지문이 수집, 사용되는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에 의의가 있다.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은 99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경찰청이 법적 근거 없이 지문을 사용, 수사하는 것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위헌여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평화 바람' 평택에서 축제로 만나다

'사회적 유랑'을 위한 필수요소인 말걸기를 단기숙성코스(?)로 마친 우리는 2월 11일 평택을 출발하여 거리에서 마을로 발길을 멈춘 이들과 반미, 반전, 평화를 외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순회기간동안 전국의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무박2일(5월 29일) '평택평화축제'를 제안했습니다.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총집결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주민들과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화적 저항으로서 축제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만나 자문을 받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아이템이라 말하면서도 성공의 척도를 대중이 얼마나 많이 참가하는가로 잡고 있었습니다.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 욕심이 생겼습니다. 유명한 가수를 불러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고, 운영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맡기는 방식을 채택하면 우리는 편하고 이름도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혹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돈을 들여야 하고 대중스타 중심으로 기획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원래 취지는 이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편하질 않았습니다. 현실적 조건의 어려움을 핑계삼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부안해방대 투쟁의 아줌마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무겁고 습한 여름날 12시간이 넘도록 신명나게 피티병과 짬뽕 등을 두드리며 합의하던, 길고 지루한 투쟁을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여 흥겨운 문화적 저항운동을 만들어낸 그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이에 본래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제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고생은 하겠지만 준비과정이 자본과 거대소비에 의존하지 않고, 참가의지를 밝힌 단체들과 개인의 노동 풀맛이, 능력과 지혜가 모여 축제를 만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바람은 평택 평화축제의 성격에 대해 몇 가지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첫째로, 평화축제가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하여 일부 문화예술인들이 무대를 주도하며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주민의 참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만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거리, 먹거리, 배움거리를 펼치고 이에 기여를 출현을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 나아가 아시아 평화의 징검다리 가 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째로, 제정은 축제 성격에 맞게 마련하려 합니다. 5천명을 목표로 한사람이 일만 원씩 내면 벽돌처럼 쌓아질 5천만 원이 축제의 종자돈이 될 것입니다. 이 돈의 1/10이 없어 자살하는 한 가정의 가장, 주부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종자돈이 평화운동의 디딤돌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과정에서 축제 취지가 한치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거대자본의 횡포에 맞선 세계화, 군사화에 저항하는 민중성이 실현되는 평화운동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뜻과 마음, 더 나아가 각각의 재량과 능력이 함께 어우러져 군사주의와 일



체의 폭력에 저항하는 평화문화의 물결이 넘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오두희 님은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단원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일 ~ 2004년 3월 8일)

### 1. 야만에 굶주린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시작(3.1)/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과 시민사회단체, 정부의 강제추방 정책 중단·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원 사면 촉구(3.2)/ 출입국관리소,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16일째 단식 중이던 이주노동자 4명 강제출국...명동성당 농성단, 야만적인 법무부 처사에 강력 항의(3.3)/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 단식 중이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강제출국 조치에 규탄 성명...검·경 합동 단속 철회, 출입국관리소 인권침해 진상조사 촉구(3.5)

### 2. 과거사 해결, 험겨운 한 발짝

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원회, '한국전쟁 당시 경찰이 민간인 34명을 서울지역 형무소에 수감 뒤 집단학살 했다'는 미국 공식문서 확인(3.1)/ 통일연대·민화협·7대 중단, 일제 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집회...'일제 잔존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기독교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의 제정을 막고 있다'며 '4.15 투표로 청산하겠다'고 밝혀(3.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안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반민특위 무산 이후 55년만의 일...미흡하지만 '역사적 단죄' 단초 마련(3.2)

### 3. 기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법 국회 통과...성매매 강요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를 내용으로(3.2)/ 여성부,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한 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고법에 항소... "술을 따르도록 재차 반복한 것은 강요이며 이는 언어적 성희롱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주장(3.2)/ 법원, '일시적 실업상태 혹은 구직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로 최종 판단...미취업 노동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을 불허한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여성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 원고 승소 판결(3.2)/ 노동·사회 단체, 개정 집시법 불복중운동 선언...헌법소원, 토론회, 반대집회 계획 밝혀(3.4)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민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3월 10일 (수)

제 2528 호

발행처 : 인민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권 하 루 소 식  
하 루 소 식 자 세 히 찾 기  
하 루 소 식 주 제 별 찾 기  
만 화 사 랑 방

<오늘의 기사 제목>

- 1.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 2.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③ 여성이주노동자 <끝>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주장 ... 변호인단, "증거 없다"

검찰이 또다시 썩은 국가보안법의 칼자루를 휘둘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결심 공간에서 서울지검 공간 1부(오세현 부장검사)는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가 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친북 단체를 결성했으며 저술활동 등으로 남한의 대학생 운동 세력들과 지식인들이 친북적인 입장을 갖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혐의는 '무기'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국내 진보 학자와 단체 등 10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워 송 교수 사건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줬다. 검찰의 구형이 발표되자, 법정 곳곳에서 한숨과 헛웃음, 야유가 흘러나왔다.

'노동당 후보위원'은 본인도 모르겠?

검찰은 "피고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로 공작금을 지원 받고,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북의 지령에 따라 받아 활동하는 등 '지도적 임무'를 수행했다"며 송 교수가 '경제인을 위장한 북의 고위 공작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 교수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그토록 주장한대로 피고가 북의 상당한 대접을 받는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서열 몇 위에 있었다면 지령을 내려야 할 입장이지 어떻게 사회과학원 등과 같은 곳의 지령을 받겠냐"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형태 변호사 등 송 교수 변호인단은 북의 노동당 후보위원은 정치국 회의 등에 참여하며 북의 정치·사회 등 여러 사정을 알고 대처해야 하는 지위인데, 외국인인 송 교수에게 이러한 지위를 맡기는 것이 가능하겠냐고 덧붙여 되물었다.

송 교수는 이날 심문에서 자신이 "94년 김철수로 기록되어 장래위원이 된 것과 95년 '약봉지'에 김철수와 송두율이 함께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있지만 북에서는 '송 선생' 혹은 '송 교수'로 불렀다"며 "노동당 후보위원이라는 것을 북으로부터 통보 받거나 이를 수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연구 활동이 주체사상 유포?

또 검찰은 송 교수의 저술이 북의 대남 적화 활동에 이용돼 국내에 주체사상을 유포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사회주의 비교 방법론은 피고의 연구분야이고 북의 사회주의를 비교하는데 있어 주체사상 연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피고는 내재적 접근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갖자고 했고, 여기에는 북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러한 연구는) 오히려 남북의 화해 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일학술회의 같은 경우 정부의 지원 속에 이뤄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단은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송 교수가 참여한 친북 단체인 '민주사회건설협의회'는 현 정부가 관여하는 민주화운동 보관 자료에서도 해외민주화운동단체로 기록하고 있음"을 검찰에 알려 줬다.

확인할 수 없는 진술이 혐의사실 근거



변호인단은 "황장엽 씨가 91년 김용순으로부터 '피고가 노동당 후보위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지만, 당시에는 김용순이 대남 담당이 아니라 이러한 말을 할 수 없는 위치였다"며 황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더욱이 여타 증인들의 진술은 주장만 있을 뿐 정작 발언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증거 아닌 증거'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증언자의 서명조차 없는 디스켓 등 증거능력을 갖추지 않은 자료도 있다며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93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93년 이후는 송 교수가 외국인 신분임을 주지시켰다.

상생·평화·이해 ... 최후진술

"16년 전에 독일말로 쓴 책의 내용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양 논리를 세우는 검찰에 아연실색했다"는 송 교수는 "지난 10월 동안의 심문과 재판을 거치면서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더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남이나 북이나'하는 양자택일의 논리가 아니라 남과 북이 공유하는 '상생'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서로 묶여 있는 검은 소와 흰 소를 예로 들었다. 대개 '흰 소가 검은 소에 묶여 있다'거나 '검은 소가 흰 소에 묶여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지만, '두 소를 묶고 있는 것은 단지 <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송 교수는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로 '남과 북의 <사이>를 생각하고 그 휴전선<제3의 공간>이 확장된다면, 전쟁이 없다는 뜻에서 소극적 평화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고 자신의 통일 철학을 밝히며 재판정에서 계속되는 분리와 반목의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재판 후 인터뷰에서 송 교수의 부인 정정희 씨는 "어떻게 진술에만 근거해서 혐의를 씌울 수 있는지 검찰의 논거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화됐다는 사회에서 아직도 구시대적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양심적 학자를 법정에 세우고 재판하는 시대에 맞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지도적 임무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할 수 없는 국가보안법 3조1항2호(반국가 단체에 가입,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무기·사형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함)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선고 재판은 오는 30일에 있을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③ 여성이주노동자 <끝>

차별은 인종과 성을 지나치지 않는다

영세공장, 식당 혹은 유흥업소에서 여성이주노동자는 더 이상 낯선 얼굴이 아니다. 이주인, 노동자,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한 몸에 짊어진 이들의 삶은 그 자체로 고달프다.

'이주노동자'에다 '여성', 차별은 곱절이 되고

차별은 인종과 성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검은 피부색의 노동자, 게다가 여성이라면 차별의 칼날은 더 바쁘다.

지난 10여 년간 동대문 봉제공장에서 일해온 라디까(네팔, 33세)씨는 "한국 노동자에 비해 3-4시간을 더 일하지만 월급은 오히려 40만원 정도 작다"고 토로한다. 차별의 곪은 비단 국내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차별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파고든다. 그 결과 영세사업장 한국 남성노동자의 귀꼬리만한 임금은 한국 여성노동자, 남성이주노동자, 그리고 여성이주노동자로 갈수록 토막토막 잘려나간다. 라디까 씨는 매일 13시간에서 14시간을 꼬박 일하고 백여 만원을 받았다. 어찌다 아파서 하루를 쉬면 3일간의 일당이 깎이기도 했다. 이러한 차별과 착취는 빈곤의 쳇바퀴에서 맴도는 삶으로 남았다. 라디까 씨는 "겨우 2살에 떼어놓고 온 아이가 너무나 보고싶지만, 이대로 돌아가면 네팔에서 먹고살기가 막막하다"며, "지난 10년 간 노예노동의 대가는 언제나 똑같은 가난"이라고 말한다.

서비스업종 여성이주노동자, 매일 15시간 이상 노동

차별과 빈곤으로 고통받기는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조선족 여성노동자도 마찬가지다. 특히 숙식을 제공하는 식당, 가정집의 경우 정해진 퇴근시간이 따로 없어 주로 40-50대의 조선족 여성노동자는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5년 전 하얼빈에서 온 한동숙(가명, 50대)씨는 역삼동의 기사식당에서 매일 15시간 이상씩 일해왔다. 그러나 주인은 한 씨의 3개월 반 임금을 때리고 식당 문을 닫아버렸다. 한 씨는 "한국인이면 세 사람 쓸 일을 조선족 두 명으로 부려먹을 땀 너무 힘들고 서러워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울분을 토한다. 한국에 온 지 보름만에 어머니가 죽고, 재작년에는 남편이 죽었지만 한 씨는 집에 가지 못했다. 한국으로 들어올 때 브로커에게 매인 천 만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한 씨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자



유로운 이동이 막힌 상황에서 이주노동자가 중간 브로커에 '갈취'당하는 돈은 보통 천만원 선. 그들이 받는 임금으로는 아무리 연장근로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이 돈을 갚는 데 최소한 3년은 걸리고, 그만큼 빈곤도 '연장'된다.

위협받는 모성과 몸

착취와 차별은 여성이주노동자의 모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평등노조이주지부 소냐 씨는 "생리휴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임신을 하더라도 장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면서 사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전한다. 미등록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아이와의 가슴 아픈 생이별도 감수해야 한다. 태어난 후 한 달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아이 역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성이주노동자가 아이를 키우기는 결코 쉽지 않다. 이주여성인권연대 이금연 대표는 "최근 자녀를 동반한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이를 맡길 곳이 없거나 부담해야 할 돈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여성이주노동자의 문제는 한국의 여성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극대화되어 나타난다"라고 지적했다.

성폭력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주여성과 본국남성 사이에 벌어진 권력으로 인해 여성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그만큼 더 일상적이다. 지난 99년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소하나(인도네시아, 32세)씨는 "관리자들이 몸을 건드리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다"면서, "특히 밤에 술 취한 남성 관리자가 기숙사 방문을 치면서 '문열어! 문열어!' 하고 소리를 지를 때는 너무 무섭다"고 말한다. 게다가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은 불법체류 등과 같은 그들의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대부분 은폐되고 있다.

중첩된 차별, 폭력, 그리고 빈곤의 울가미에 갇힌 여성이주노동자의 삶은 한국사회의 척박한 인권수준을 그대로 드러낸다. 여성이주노동자의 삶은 이주노동자와 여성 각각에게 쏟아지는 차별과 폭력을 곱절로 감당해야 함을 말한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 혹은 산업연수생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은 차별과 폭력에 여성이주노동자를 더 쉽게 노출시키고 있다.

때문에 여성이주노동자에게 여성으로서 또한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돌려주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그들에게 동등한 사회구성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제목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3월 11일 (목)

제 252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보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2.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3.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개약된 집시법의 몇몇 조항을 개정 할 것이 아니라 집시법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과 시민불복종운동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집시법 폐지' 주장이 터져 나왔다.

10일 오후 2시, 86개 인권·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개약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집회·시위를 불온한 것으로 파악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인 집회·시위를 통제하고 금지하는 현재의 집시법은 불필요하다"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교수의 주장에 박수를 보내며 깊은 공감을 내보였다.

지난해 12월 개정 이전부터 '집회 제한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은 △소음규제 △주요도로 행진금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주변집회금지 △국회 등 특정장소 주변 집회제한 확대 등의 내용으로 개약되어, 노동·인권·사회단체로부터 '집회 금지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연석회의는 개정 집시법의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민주노동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개정된 집시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갔다. 권 변호사는 △소음규제 조항으로 소규모 침묵 피켓 시위 형태 외에는 모두 불가능하게 된 점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사관 앞 집회는 업무가 없는 휴일에 대사관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소규모로밖에 할 수 없게 된 점 △서울의 동서남북을 잇는 15개 주요도로에서는 행진 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집시법 개선편호사 역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허가되는 집회신고의 업무 및 불복종차를 공정한 다른 기관에 이관하고, 경찰은 필요업무만 하도록 하여 경찰의 과도한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정된 집시법의 문제점뿐 아니라 집시법 자체가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상희 교수는 "집회·시위는 의사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 중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하고 "헌법에서도 기본적 권리로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단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벌에 처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교수는 "집회·시위에 관한 규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지방 조례로 규정하고 위반에 대한 조치도 형벌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조치 정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영도 변호사 역시 "집시법의 규정을 어겼다고 형벌에 처하는 것은 마치 경찰서장이 자의적으로 마구 지정한 좌회전 구역을 어겼다고 형벌에 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집시법 위반자를 범법자 취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시법 불복종 운동은 경찰의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법 집행만이 아니라 법 자체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데에서 시작된다. 한 교수는 "집시법 불복종 운동은 '부정의가 만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민의 의무'라며 "양심에 따라 공동체적 정의를 위해 집단으로 표현되는 불복종은 사회적 동의 속에 정당화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불복종 운동과 안전한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집회 시위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찰서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고발, 경찰의 제량권 남용과 관련한 헌법소원, 집시법 위반하기, 소송 비용마련 저금통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 참여 유도' 등의 방법이 제안됐다.

<기사 처음으로>



##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거부

여론의 거센 비난 속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148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는 '불복종운동'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도입되는 실명제는 정치권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바로 오늘부터 불복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가 확인되어야만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선거 관련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러한 조치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외국에서는 이미 의명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법률에 대해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와 신용정보회사들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어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실명인증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정치적 발언은 원칙적으로 봉쇄된다. 이와 관련 남궁모(17세) 씨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상태이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는 4.15 총선에서 사실상 시행되는 것조차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의 실명인증 프로그램 설치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4월 15일 총선을 한참 넘긴 후이다. 또 실명제가 적용되는 '인터넷 언론'은 정치·문화·사회적 내용을 다루는 홈페이지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 홈페이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이트를 실명제로 단속하거나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극단적인 집행이 예상된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 적용되지도 못하는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킨 건의가의 심스럽다.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법안이 이렇게 엉성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라고 밝히며 "법안이 위헌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실명 확인 시스템 설치 거부와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 진행 등 공동행동을 전개하고, 법이 공포되는 즉시 위헌 소송을 예정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 반전·평화 신념 행동으로 이어가는 병역거부자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감옥을 갔다왔다는 것도 바깥에 나와 있다는 것도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곳을 '바깥'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아직 마음은 '그 안'에서 완전히 못 떠나는 듯 합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감옥에 있었던 것이 꿈같기도 하지만, 감옥의 경험을 소중한 밑거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4일 성동구치소를 나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염창근 씨의 말이다. 염 씨는 2003년 11월 13일이 입대 예정일이었으나, 반전평화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1월 29일 구속, 4일 보석으로 구치소를 나왔다. 병역법 88조 1항1호의 위헌 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을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불고신자로서 병역거부를 선언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의제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킨 오태양 씨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002년 6월 중단됐던 오 씨의 재판은 현재의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재판부가 바뀌면서 17일 다시 시작된다. 오 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국제평화·인권·난민 지원활동을 하는 '좋은벗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반면에 또 다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임태훈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임 씨는 신체검사 당시 군 당국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가려내기 위해 만들어진 설문 문항에 표시하는 것을 거부하며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소위 (동성애를) 비정상 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대에 입대를 거부함으로써 불복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 구속, 수감된 임 씨는 13일째 단식을 벌이고 있다. 임 씨의 단식은 이성애가 아닌 다른 성적 지향을 '비정상'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다.

국제엠베스티는 2월 27일 성명을 통해 "임태훈 씨는 윤리적, 정치적, 인류애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것 때문에 구금되었으므로, 양심수의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임 씨를 포함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수감중인 모든 사람들의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



구했다.

학살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나라에서 반전·평화의 신념으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은 '범법자'가 되어 구금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평화는 군대와 함께 오지 않는다'는 병역 거부자들의 신념은 행동으로 계속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3월 12일 (금)

제 253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권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파견법' 차라리 '노예제'라고 불러!
2. '네모난 원'을 그리는 국가보안법
3. <기고> 불법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파견법' 차라리 '노예제'라고 불러!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법 철폐 결의대회 가져

최근 노동부가 파견법을 사실상 전 업종에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노동자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파견법 확대 규탄과 파견법 철폐촉구'를 요구하며 광화문 한국통신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간병인노조, 전국시설편리노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노동부의 파견법 확대 방침이 가져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의 결의를 모았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노동부의 대책은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화 하는 것으로 결국 많은 노동자에게 고통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본이 노동력을 쉽게 착취하기 위해 노동유연화 정책을 지속해나가는 이상 노동자도 노동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발표 이후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는 이용석 씨의 죽음 등으로 촉발된 40여 일간의 파업결과 '더 이상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고 정규직 신규채용 때 50%를 기존 비정규직 위주로 채용 것'을 공단 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대책에 발을 맞추기라도 한 듯 '비정규직 운영 지침'을 밝히며 더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려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정중우 위원장은 "공단은 지금과 같은 '직접고용 계약직'이라는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는 대신 '파견직이나 단기일용직'의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동부의 대책을 보면 그동안 여러모로 준비한 흔적이 역력하다"며 "결국 노동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인식전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파견법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파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투쟁으로 함께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은 정부의 '파견노동자 보호대책'이 한마디로 '기만적이고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파견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파견업체는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브로커에 불과하고 파견업체가 실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저임금과 무권리 상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파견의 확산이 파견법의 엄격함 때문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마치 노예노동을 엄격하게 규제해서 불법 노예가 많이 생기므로 노예노동을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결국 불법파견을 해결하는 일은 파견을 없애는 일 뿐이라고 참석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 처음으로>

'네모난 원'을 그리는 국가보안법

송 교수 무죄석방 촉구, 사회 원로·인사 기자회견 열려

"평화통일을 헌법에 명시하고도 상대방을 적으로만 보는 '국가보안법'은 한 마디로 말해서 '네모난 원형'을 그리려는 애초부터 무모한 법이었습니다"



11일 오전, 송 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 원로·인사들의 기자회견에서 구치소에서 보낸 송두용 교수의 편지가 낭독되었다. 이날 모인 진보적 원로·인사들은 지난 9일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의 처사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수행 교수는 "우리사회가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사실상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구형을 보니 놀랍기 짝이 없다. 이것은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며 "이 기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균 교수 역시 "검찰이 70년대식 시대착오적 논리에 입각하여 명백한 혐의 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이 추리소설을 쓰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냉전적 사고에 젖어있는 검찰의 행태를 꼬집었다.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은 분단된 현실에서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고통에 주목했다. 백 소장은 "우리에게 '경계'란 무엇인가? 우리의 가슴에다 들이박은 칼"이라며 "경계인'이란 칼 위에 올라선 사람이다. 칼 위에 올라서니까 피가 철철 흐른다"며 격양된 목소리로 송 교수의 처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한편, 부인 정정희 씨와 아들 송린 씨는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자리하고 있었다. 정 씨는 "민주화 됐다고 믿고 꿈에도 그리던 조국에 왔지만, 결국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고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나 정 씨는 "구형이 판결로 연결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깨어 있는 사회라고 믿는다"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한사람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을 것인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양심들이 주목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편집자주] 최근 불복종운동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그 의미를 특별기고를 통해 살펴본다.

3월 들어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번이나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4일에는 8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에 대해, 10일에는 14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불복종운동의 대상이 된 두 법률들은 모두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개악되었고, 그 절차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한 채 경찰의 단속편의만 수월하게 한 집시법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입을 봉하려는 인터넷 실명제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킨다. 싫은 소리는 듣지 않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 법률들은 주로 밀실에서 정치권들이 야합하여 통과시킴으로써 당연히 거처야 할 입법과정의 정당한 절차도 아예 무시했다.

따라서 불복종을 통한 저항만이 현재의 불법을 제거하고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의 불복종선언은 '악법은 어겨서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 우리 사회의 불복종운동

사실 불복종운동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사회에서도 불복종운동은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 단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할 뿐이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는 이들이 있고, 살인 행위에 동조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보안관찰법 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1980년대 편파보도를 일삼던 KBS에 대한 시청료 납부거부운동과 2000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낙선운동도 대표적인 불복종운동의 예로 꼽힌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불복종운동은 '6월 항쟁'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의 개헌 요구를 무시한 채 호헌을 선언했던 전두환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되었던 6월 항쟁은 현실 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집단 행동으로 불법 정권을 물리쳐 민주화를 진전시켜냈다. 그 6월의 거리에 누가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랐던가. 만약 그랬다면 위대한 민주항쟁은 없었을 것이고, 군사독재정권은 지금까지 이어졌을 지도 모른다.

#### 미래의 불법까지 제거

유럽 사회에서 이러한 불복종운동은 이미 19세기부터 구체적인 논리를 가진 저항 운



동으로 나타났다. 1차 세계대전 이래 반전·평화운동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도 이제 유럽과 유엔에서는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불복종운동 사례로는 킹 목사가 주도했던 흑백차별철폐운동과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을 들 수 있다. 비스의 흑백 좌석 분리에 반대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던 차별에 대해 투옥되면서도 저항을 멈추지 않아 흑백분리정책을 시정해냈다. 베트남 전쟁에 징집대상이었던 청년들은 소집영장을 불살랐다. 베트남전 징집거부운동의 상징적 인물 덴 베리컨은 "내가 이 카드를 불태우는 이유는 사람을 불살라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종이를 태워 버리는 게 낫기 때문이다"란 말을 남겼다.

영국의 불복종운동은 한 걸음 나아가 미래의 불법을 제거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1996년 영국에서는 윌슨 등 4명의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인도네시아 독재정권에 판대할 호크 전복기를 파괴했다. 당시 수하르토 정권이 동티모르에서 인종청소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반인륜적 목적으로 사용될 무기를 파괴하는 행동은 인도주의적 목적이므로 불법일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변론을 법원이 수용,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1999년 '트라이던트 보습 만들기'란 평화운동단체의 엔지젤터 등 3명의 여성 활동가들이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연구기지에 침입하여 대부분의 컴퓨터와 관련 장비 및 자료들을 호수에 던져버리고 '핵 살인을 위한 연구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도 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국제법상 불법무기인 핵무기를 파괴함으로써 불법무기의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불복종운동은 미래에 일어날 불법을 예방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 불복종운동에 희망을 걸자

논자들은 보통 불복종운동이 성립할 조건으로 도덕성, 정치성, 공공성, 중대성 등을 꼽는다. 당장 불복종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불법행위로 처벌될 터이지만, 국가 스스로 정통성과 정당성을 방기한 책임이 있으므로 불복종운동은 사회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고, 이후 부정의의 법률도 바로 잡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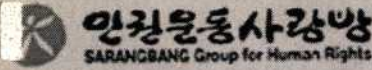
그러므로 집시법이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운동은 헌법수호운동이기도 하다. 이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처벌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희생 위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은 한 단계 전진할 것이다. 국가가 인권의 존중과 실현의 의무를 망각하고 정치권이 체 이익 쟁기에만 혈안이 된 지금,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불복종운동은 그래서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

#### <기사 처음으로>

제본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화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3월 13일 (토)

제 253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2.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3. <인터뷰>업무복귀 앞둔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4. 강요당하는 '이주 노동'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시정잡배들의 추악한 정치 싸움판이 되어 반민주, 반인권 법률을 양산해 온 국회가 드디어 일을 내고 말았다. 부정부패와 당리당략에 매달려 이천투구에 골몰하던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내몰린 야당들이 도덕성이나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중대사안도 정치적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술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재삼 확인할 필요도 없다. 5공 신군부, 냉전수구외교와 지역주의에 뿌리내리고 있는 그들은 그러기에 들끓는 반대 여론도 외면한 채 탄핵을 결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 작금의 사태를 분노할 자격이라도 있는가! 그들은 이라크 파병, 한-칠레 FTA, 집시법 개악, 인터넷 실명제 등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법안과 결의안을 수구보수정당과 한편이 되어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 경제강령을 무슨 경전처럼 떠받들고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정책 강령을 개혁이라고 호도하던 그들이 지금에 와서 민주투사인 양 치장하는 것도 역겹기만 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진정 분노해야 하는 것은 이 나라 주권자들이 정치로부터 배제되어 들러리가 되고 있는 정치현실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를 이천투구의 전투장으로 삼을 권능을 부여한 것은 참담하게도 주권자들이다. 주권자들은 4년마다 한번 투표로 대표를 뽑을 수 있을 뿐, 그 대표를 소환할 수도, 주권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도 없다. 더욱이 정당을 만들어 국회에 진출하기도 어렵다. 이런 예들은 이미 다른 정치 선진국들에서는 일반적인 정치제도가 되었는데도 말이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가짜 대표들에게 대표성을 위임한 채 국회를 바라보며 분노와 허탈의 충주먹질만 해낼 것인가. 오늘 6월 항쟁을 계승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양판치고 있는 가짜 민주주의 정치판을 뒤엎는 것이 진정 6월 항쟁의 계승일 것이다. 그 길은 주권자가 직접 참정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수립해야만 이를 수 있다. 그것이 가짜 대표들이 저지른 이번 탄핵 사태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인권적인 교훈이다.

<기사 처음으로>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정부의 '씩씩이' 추방정책 속에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날날이 고발됐다. 12일 오전 10시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단속이 진행 중이던 1월부터 최근까지 마석, 안산, 고양·일산, 인천·



부천지역에서 64명을 조사한 결과, "일상적인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있던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단속·추방 정책 실시 이후 더 가혹한 인권부재의 상황에 내던져졌다"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단속 이후 자유로운 외출과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산재나 질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권 박탈이 심각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 확인됐다. 방글라데시 출신 아삼 씨는 단속이 두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다가 견디다 못해 입원했지만, 그마저도 두려워 결국 3일만에 퇴원해야 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면서 따라다니는 빈곤의 무게는 단속의 눈을 피하는 이주노동자에게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아짐, 잘랄 씨 등 4명은 단속이 두려워 산 속에서 라면과 빵만으로 연명해야 했다. 주거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집중단속 이후 실직 상태에 빠진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콘테이너 박스 등에서 집단 거주하고 있다는 것.

한편, 지난 2일 4차 단속이 시작된 이래 단속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인권침해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증표 제시의 의무 등 법적인 절차를 지키는커녕 욕설, 폭행 등 비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5일 밤 의정부에서는 정부단속반이 이주노동자 숙소 문을 부수고 들어가 4명을 강제 연행했다. 안산의 외국인노동자센터 이해령 씨는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는 안산역 앞 상인들도 '욕하고 때리면서 동물 잡는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을) 잡아가더라'며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1월 합동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정부는 2월말까지 자진출국 하는 이주노동자에 한해서 고용허가제로 재입국을 허용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 안산의 비아르(51세) 씨는 "한국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지난달 22일 TV에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고용허가제만 도입됐지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태를 인정하고, "법무부가 올해 정책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 가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장관이 인권보장의 의지가 있다면 25일 넘게 단식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 강제추방의 부당성을 알리는 이주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 <인터뷰>업무복귀 앞둔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탄압은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곳"

지난해 7월부터 노조탄압으로 인한 '불안·우울 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로 산재요양을 해온 청구성심병원 노조원 8명 중 4명이 오는 15일 일터로 복귀한다. 나머지 2명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요양기간을 연장했고, 2명은 분만휴가 등으로 추후 복귀할 예정이다. 8개월간의 요양을 끝내고 돌아가는 이들에게 청구성심병원은 과연 안전한 일터일까? 12일 만난 조합원 이명(30세)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업무복귀를 앞둔 심정은 어떠한가?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현장에 복귀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우울증이 재발하면 영원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움이 앞선다. 하지만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다른 조합원들을 생각하면 복귀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탄압을 받았나?

노조탄압이 본격화된 시점은 2001년 경영진이 바뀌면서부터였다. 조합원들만 부서를 이동시켜 뿔뿔이 흩어놓더니 부서장들을 앞세운 탄압이 시작됐다. 병원측은 조합원을 탈퇴시키는 부서장에게는 연봉을 올려주고, 협조하지 않는 부서장은 해고하는 수법으로 '조합원 탄압 경쟁'을 유도했다. 결국 65명에 달했던 조합원은 2003년에 19명이 되었다. 모든 조합원들이 폭언, 왕따, 감시 등 비슷한 탄압을 당했다. 내 경우,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부서장에 의해 감금당한 채 맞아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었다. 환자, 동료직원들 앞에서 "쓰레기 같은 인간" 등의 폭언을 들어야 했고, 식사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도 일일이 감시당했다.

◎노조탄압 상황에 변화는 없나?

전혀 없다. 산재요양 기간 중에도 남아있던 조합원에 대한 탄압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 2명의 조합원이 불안·우울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어 병원진단을 받을 계획이다. 조합원을 탈퇴시키는 관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도 그대로이고, 노조비방 일색인 신입사원 정신교육도 계속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아예 친 병원 성향의 직원 인맥을 통해서만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98년 조합원에게 동물투척을 주도했던 사람을 원장으로 승진시켰다. 업무복귀를 앞두고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노조의 공문에는 묵묵부답이고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다.

◎노동부와 검찰에서의 조치는?

지난해 10월 노동부는 청구병원의 조합원에 대한 폭언, 폭행, 왕따, 감시,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와 그 밖의 38가지 위법사항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제야 검



잘 지워 아래 노동부 추가조사가 실시될 계획이다. 검찰이 늦장을 부리고 있는 동안 병원의 노조 죽이기는 한시도 멈춘 적이 없다. 청구성심병원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자유롭게 보장되기 위해선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업무복귀 후 노조활동의 전망은?

노조는 돈벌이를 최우선시하는 경영에 문제제기를 해왔고, 때문에 탄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과잉진료비 청구에 대한 문제제기 등 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지역차원에서 벌여나갈 것이다. 그것이 민주노조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기사 처음으로>

## 강요당하는 '이주 노동'

### 3월 반딧불,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장을 찾아

지난 10년 동안 단속과 출국 유예를 반복하며 '불법 체류자'를 양산해 온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사냥감'으로 취급하고 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 정부는 애써 감추고 있던 폭력의 밑바닥마저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죽어간 친구를 기억하고, 곱기를 끊고 있는 동료의 의지를 되새기며, 차디찬 명동성당 들머리를 지키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3월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은 100일을 훌쩍 넘어서 명동성당의 이주노동자 농성장을 찾아 따뜻한 불빛을 지피고자 한다.

첫 번째 상영작 <세계화의 난민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한 꺼풀씩 보여주며, 이주가 발생하는 기저에 자본의 세계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전한다. 자유 무역체제, 다국적 기업,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민영화, 임금 동결 등 다르게 불리지만 다르지 않는 통치질서가 필리핀, 볼리비아 등 민중의 일상 구석구석을 어떻게 파고 들었는지 주목하면서, 이주를 '강요당한' 이들의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목소리를 담백하게 실었다. 동시에 이주 노동자들이 아메리카 드림으로 표상되는 '자유의 땅'에서 실상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에 나서는 등, 짜여진 삶의 테두리를 넘어서기 위해 소중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음을 포착한다. 작품을 보고있노라면 시종일관 애잔한 선율을 따라 흐르는 물음이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두 번째 상영작은 폭력적인 합동단속 실시가 본격화된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계속돼 온 이주노동자들의 투쟁 면면을 성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작업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독소 조항에서 드러나듯이, 고용주와 종속 관계를 조장하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획득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 때 : 3월 18일(목) 오후 7시 △ 문의 : 02-741-2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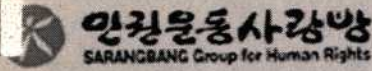
△ 곳 : 명동성당 들머리 (우천시 향린교회 1층)

<기사 처음으로>

제목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안런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3월 16일 (화)

제 253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보기  
인하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2. '매향리'에 봄 오나
3. ●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칠레전투' 보기를 권하며
4.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8일 ~ 15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최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확산되는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정치적 권리의 신장과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탄핵사건은 아무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해도 대리자에 의한 정치체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을 수는 있지만 통제하지 못하는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적 의사에 반하는 이라크파병, 한-칠레 FTA비준과 각종 인권관련 악법 등 제정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김 집행위원장은 "촛불집회와 같은 지금의 국민적 저항이 충선으로 동원되거나 환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중들 스스로 정치나 사회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대 김종서 교수 역시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중대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헌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은 4년 임기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될 뿐 이후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고 있지 않다. 따라서 4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선거'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지금과 같은 대의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에서도 국회를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최원 씨는 "단순하게 탄핵반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제도를 문 제삼고 그것을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 나뭇의 그 밭으로 돌아가지 않는 길"이라고 못 박았다.

국민소환제 추진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http://cafe.daum.net/sohwanje)을 추진하고 있는 네티즌 시인의 마음(아이디)은 "국회의원이 잘못을 하면 서명을 받거나 기타 방법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서명운동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부안대책위 김진원 조직위원장은 "광화문에서 국민의 불복운동은 단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이 되어선 안되며, 고삐 풀린 국회를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하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에 항의하는 집회의 물결은 촛불시위를 통해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반전집회 및 내달 총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주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한 네티즌의 지적처럼 화석화되고 형식화된 민주주의를 실질화하고 이를 정치적 권리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재검토와 확장이 필요하다.

<기사 처음으로>

'매향리'에 봄 오나



**대법원, 사격장 훈련으로 '주민 피해 있다'...그러나 폭격은 계속 돼**

매항리 미군 사격장 훈련 피해에 대한 손해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4일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만큼 국가는 한-미행정협정(SOFA)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주민 14명은 975만원에서 1,100여 만원의 배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이번 판결은 98년 2월 주민들이 소송을 낸 지 6년만에, 2심 판결이 난 지 2년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이 땅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서글펫죠" 매항리주민대책위원회 전만규 위원장은 1951년 사격장이 만들어진 이후 지난 50년의 세월동안 고통받았던 매항리 주민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했다. 전 위원장은 "이제야 법을 통해서 생존권을 보장받는다"고 안도의 한 숨을 쉬고 있습니다"며 이번 승소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전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매항리 문제 해결의 시작점일 뿐이다. '농심'에 대한 폭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 인근의 민가로부터 1,500미터 떨어진 매항리 앞 바다에 있는 농심은 매항리 해상상의 주요 폭격 목적지점으로 사용되어 온 곳이다. 오희 사고와 소송 등으로 주민의 항의가 잇따르자 2000년부터 해안 쪽으로 비행로를 변경했지만 마을 주민은 아직 폭격소음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이소희 사무국장은 "폭격이 멈추지 않는 이상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며 사격장 폐쇄를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사격장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단기적인 방편이나 장기적인 계획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방관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사격장 문제를 하루 빨리 검토 대상에 놓아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2001년 8월 주민 2,356명이 추가로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소송은 아직 1심 계류중에 있다.

<기사 처음으로>

**●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칠레전투' 보기를 권하며**

몇 해 전 인권영화제를 통해서 소개된 '칠레전투(The Battle of Chile)'를 두고 '근데 왜 인권영화제에서 상영을 했나?'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들은 바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인권영화보다도 오래도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 영화가 '왜 인권영화냐'는 질문을 받으며, 세상 칠레전투에 담긴 분노와 눈물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됐다.

1970년 칠레에서는 선거를 통해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한다. 살바도르 아옌데는 공산당, 사회당, 군소 좌파까지 참여한 민중연합전선의 후보로 나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기독교 중의 반혁명 공세와 우익정당의 전 방위적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은행, 구리, 철강 등 국가기간산업의 국유화, 어린이들에 대한 무료급식, 토지몰수 등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새로운 사회를 향한 칠레 민중의 신념과 열망 속에 아옌데 대통령은 더디지만 한 걸음씩 희망을 현실화시켜 나갔고, 칠레 민중은 73년 3월 총선에서 민중연합 승리로 이에 호응했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파업과 미국의 경제 봉쇄, 더해지는 정치불안 끝에 결국 73년 9월 11일 유혈 쿠데타를 일으킨 피노체트에 의해 선거를 통한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 실험은 끝이 났다.

칠레전투 1, 2부는 73년 3월 좌우의 뜨거운 격론 장이 된 총선부터 9월 폭격에 휩싸이는 대통령 궁에서 최후를 맞는 아옌데 대통령의 마지막 편지로 마무리된다. 역사의 진보와 민중의 힘을 믿는 아옌데의 편지는 대통령 궁의 폭격과 함께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아옌데 대통령의 편지보다도 더욱 지울 수 없는 기억은 3부에 나오는 노동자, 농민,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열망하는 새로운 세상 그리고 신념과 실천을 담고 있는 3부는 칠레전투의 핵심이다.

경제 봉쇄로 부품조달이 안 되는 공장에서 새로운 물건을 발명하며 공장을 지켰던 노동자, 자본가의 매점대석으로 생필품이 부족해지자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던 '민중상점'에서 휴일을 내서 일을 하던 직장인, '한번 죽는 건데, 평생 착취당했던 노동자라 이제 대의를 위해 죽고 싶다'고 담담하게 말하는 노동자의 울림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진다. 삶의 현장에서 분출된 민중의 자발적 저항이 펼쳐던 '새로운 사회의 실험', 그것의 실패는 분노와 눈물이다.

민중의 분노와 눈물이 인권이 아니라면 무엇이 인권이 될 수 있겠는가? 칠레전투는 이루지 못한 과거의 혁명을 다룬 오래된, 그저 역사에 남을 기록적인 영화가 아니라 현재에도 끊임없이 진행중인 민중의 마음을 담은 영화다. 그래서 감히, 인권영화 '칠레전투' 보기를 권한다.

◎ 고근예 님은 인본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1. 경계인을 가둔 국가보안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현 부장검사)는 송두율 교수에게 '반국가단체 가입 및 중요 임무 종사, 개전의 정이 없음, 경계인으로 위장하여 대남공작활동을 펼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5년 구형(3.9)/ 송두율교수석방과국가보안법철폐를위한유림대책위원회, 송두율교수의조속한석방과귀향을위한제주모임 등, '검찰의 구형은 수구·냉전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송 교수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 연이어 발표(3.9~12)/ 송 교수의 아들 린 씨,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앞 1인 시위(3.10)/ 사회원로·인사 162명 '송 교수 무죄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3.11)

2. 악법이 비켜라 불복종 운동 나가신다!

여론의 거센 비난 속에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9)/ 148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 불복종운동돌입 선언 기자회견 개최(3.10)/ 신철호 민주당 전자정당추진기획단장,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익명게시판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실명제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혀 '인터넷실명제' 심각성 정치권 스스로 실토(3.10)/ 개정집시법 토론회... '집시법 폐지'와 '시민불복종운동' 주장 터져 나와(3.10)/ 경찰청, 광화문 일대 탄핵규탄 촛불집회에 대해 집시법 위반으로 불법집회 규정(3.15)

3. 목숨 건 단식도 의면하는 정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21일 동안 단식 중인 깨비 씨와 굽타 씨, 병원 진료 받아... 깨비 씨, 체중 36kg 혈당 43(쇼크사 가능성 높은 상태) 탈수에 장흡착 증세로 병원 입원 요구했으나 무시당해(3.8)/ 법무부 소속 단속반원들, 이주노동자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목사에게 욕설 및 행패... 출입국관리소직원의 폭력적 연행으로 인권침해 심각(3.9)/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조사보고서 발표... 강제추방 정책 이후 열악해진 인권상황 고발(3.12)

4.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구금시설 수용 여성 44% 성적 수치심 느낀 적 있다' 발표(3.8)/ 현대중공업 유제순(55, 대조립부)씨, 사측의 산재처리 포기 종용과 압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음(3.9)/ 이가빈 씨 외 청소년 3명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제도 '헌법 10조 개 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3.9)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3월 17일 (수)

제 253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인권이 더욱 절실한 그 곳'
2. > 즐거운 물구나무 < 단일민족이 가져다 준 피의 순수성이란? 없다!
3. KAL858기 사건의 진실, 누가 은폐하는가
4. '가족행위 교도관, 꼭 처벌해야'
5. <기고> 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인권이 더욱 절실한 그 곳'

인권단체, 조건부 시설내 인권유린 진정·고발

조건부신고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자들의 인권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시작됐다.

16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정책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을 낸다고 발표했다. 또한 성실정양원과 은혜기도원의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정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 추진 지침'(아래 조건부신고 지침)이 현행 정신보건법에 위반된다고 조건부시설 등록에서 정신요양시설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을 양성화하겠다고 내 놓은 '조건부신고 지침'은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이 2005년 7월까지 법정 신고요건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신고시설의 기준 완화와 정부지원의 확대를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은 일반적으로 신고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과 다르게 허가제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대책위 공동변호인단 김철준 변호사는 "조건부신고 지침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조차 신고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무허가 정신요양시설이 정신질환자들을 불법적으로 수용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정부에서 묵인·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조건부시설 등록 대상에서 정신요양시설을 제외해 엄격히 허가제로 운영하고, 입소절차와 생활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인권위의 정책권고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9월부터 충남 '은혜사랑의집'과 경기도 '성실정양원'을 2차례씩 방문 조사하여 그곳에서 자행되는 여러 인권침해를 조사한 바 있다. 그 중 △보호실에 감금한 채 3일내지 7일간 강제토 금식 △원하지 않는 예배 강요 △강제노역에 동원 △항정신성 약물 강제 복용 △적절한 치료 방기 등 현행법을 어기면서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하여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됐다. 특히, 가족면회 시에 면회내용을 기록하거나, 전화 사용도 관리자 감시 하에 이루어지는 등 생활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감시·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면회의 자유 제한은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위반된다. 대책위는 조사 당시 한 생활자가 "면회를 봐도 말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옆에서 다 적기 때문이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좋은 말만 한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대책위는 정신요양시설 수용자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대전의 정신과 전문의 김모씨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정하 활동가는 "정부가 민간단체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집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문제 시설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시설폐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책위는 추후 국가와 시설장을 상대로 시설생활자들이 그동안 받은 비인간적 처우와 국가의 책임방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 즐거운 물구나무 < 단일민족이 가져다 준



## 피의 순수성이란? 없다!

인류가 처음 아프리카 정글에서 평원으로 나온 이후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계속 한 결과 인류는 지금처럼 지구 전체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어찌 보면 초록별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유인원은 한 조상으로부터 파생된 후예임이 분명한데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존재하는 '탄생신화'는 마치 인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로 생각해 게 한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신화'가 있다. 다름 아닌 '단일민족' 신화.

지난 해 교육위 국정감사에 따르면(2003.5.31 기준) 전국 초·중학교를 다니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205명에 이른다. 이주노동 10년의 역사를 반증하듯이 이미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있음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유구한 단일민족의 신화가 교육을 통해 학습되고, 스포츠 중계를 통해 확인될 때마다 이러한 신화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피의 순수성이 우월의 잣대로 환원되는 순간 다른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과 차별은 오히려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나치의 예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순수혈통'에 대한 상징은 다른 공동체에 대한 배타적인 관계(침략 전쟁, 몰살 등)를 가능하게 한다. 물론 그 공동체 내부에서도 '순수혈통'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에게 대한 낙인과 차별이 쉽게 용인된다. 우리 사회에서 혼혈인, 이주노동자, 귀화한 외국인, 탈북자, 화교 등의 사회적 지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 토론회에서 언급된 필리핀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 한국 여성의 이야기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낸다. "파출부로나 일을 해야할 것 같다"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자조 섞인 말. 자신의 미래에 대해 꿈꿀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어 그나마 아이들의 교육권이 확보되기는 했지만 학교 내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이방인'으로 존재한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실체를 무시한 채 '단일민족'이라는 허구만을 쫓아 간다면 부계중심의 가족주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은 결코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 KAL858기 사건의 진실, 누가 은폐하는가

### 사건자료 공개 못하겠다고 항소 나선 검찰...유가족들 분노

KAL858기 실종 사건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 희생자 가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6일 'KAL858기 가족회(아래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검찰의 KAL858기 사건 정보 비공개와 항소를 규탄하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시각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도 부산시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AL858기 사건기록의 공개가 비공개보다 더 공익적"이라며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했다.

지난달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담당 백춘기 부장판사)는 KAL858기 실종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KAL858기 실종사건과 관련한 수사, 재판 기록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고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아니라며,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적 손실보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남아 있는 광범위한 의문에 대한 진상을 밝혀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KAL858기 사건 관련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에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호하고자 하는 국익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국익이나"고 되물었다.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검찰의 행위는 이 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만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고, 그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사건재조사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가족회 차욱정 회장은 "검찰에게 권한을 준 것은 그만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라며 과거의 악행을 은폐하는 데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 검찰을 규탄했다. 또한 "무책임, 구태 답습, 그리고 수구적인 검찰에 채찍질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들뿐"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가족회와 대책위는 KAL858기 실종사건과 관련해 △이륙시간의 조작 △폭파에 사용되었다는 라디오에 콤포지션 C4 폭약 350g이 들어갈 수 없는 점 △김승일의 사진이 편입되었다는 점 △실종자 명단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 12가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KAL858기의 실종은 1987년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향하던 비행기가 버마 상공에서 갑자기 종적을 감추고 탑승객 115명 전원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북한의 김정일이 88올림픽을 방해하려고 북한 공작원 김현희에게 친필 지령을 내려 폭파시킨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작극이라는 수많은 의혹들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



건은 87년 12월 대선 직전에 발생해 이후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 "가혹행위 교도관, 꼭 처벌해야"

###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행 의혹...인권단체, 진상규명 촉구

최근 영등포 구치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사건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본지 2004년 3월 6일자 제 2526호 참조)

다산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8개 인권단체는 16일 강금실 법무부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지난 1월과 2월 영등포 구치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폭행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폭행을 행사한 교도관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다.

이들 인권단체는 서한에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영등포구치소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무부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영등포 구치소 및 법무부의 대응과 관련해 매우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폭행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모 교도관이 지속적으로 다수의 수용자들을 폭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교도관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했다.

영등포 구치소 폭행사건은 지난 1월 교도소내의 의료행위에 대해 소장면담을 요구하던 안 모 수용자를 교도관이 폭행한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안 씨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강 모 수용자(전국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 회원) 역시 교도관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면서 사건은 더욱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피해 수용자들은 물론 동료 수용자들에 대한 변호사접견 등을 통해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섰으며, 폭행을 당한 안 모 수용자는 지난 2월 해당 교도관들을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신의 폭행 사건을 진정했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 폭행사건에 항의하며 지난 2월부터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또 한명의 피해자 강 모씨는 지난 10일 "사건의 추후 처리과정을 지켜보겠다"며 단식을 중단했다.

<기사 처음으로>

## <기고> 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편집자주] 여야정당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밝혔던 것과는 달리 16대 국회는 사회보호법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사회보호법 폐지운동을 전개해온 청송감호소 출소자로부터 그간의 심경을 들어본다.

2004년 2월 26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의 염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회 법사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비겁한 논리를 내세워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을 '법안1소위'에 회부했다. 이로써 16대 국회에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의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003년 8월 22일 청송제2보호감호소를 가출소한 후 나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 일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그 동안 사회보호법폐지운동에 나름대로 노력했던 나는 사실상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된 그날, 국회 정문을 나갈 때까지 참았던 눈물과 분노로 밤을 하얗게 잤다. 통곡으로 밤을 지낸 사람이 어찌 나 한사람 뿐이겠는가 만은 내게는 유독 큰 아픔이었다.

사회보호법이 생긴 이래 24년간 보호감호의 반인권적·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사회적 절대악자인 피감호자들은 항상 외면 당해왔다. 그러다가 2002년 4월부터 계속된 피감호자들의 여섯 차례 단식투쟁과 인권시민사회중교단체를 망라한 여러 단체의 피눈물 나는 노력에 힘입어 이번야말로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16대 국회는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라고 할 수 있는 제245회 임시회 회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여론의 질타를 의식한 나머지 회기 이틀을 앞둔 2월 26일 부랴 부랴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폐지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회가 보여준 사기극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이 상정되자 전직 특수부 검사 출신 합승회 의원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게 '폐지하면 피감호자들이 한꺼번에 사회로 쏟아져 나올 것인데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용균 의원은 출처도 분명치 않은 살인사건을 들먹이며 '흉악범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고 거들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대안을 3월중에 마련하겠다'고 장단을 맞추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추임새를 넣으며 법안1소위로 회부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것은 아바위다. 파렴치한 사기극이다.